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- (한국)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화
- (일본) 코로나 사태와 향후 일본의 지역활성화 대책
- (미국) 로스앤젤레스 시(City of Los Angeles) “임팩트 프로젝트(Project imPACT)”
- 전과자 취업 지원을 통한 재범 예방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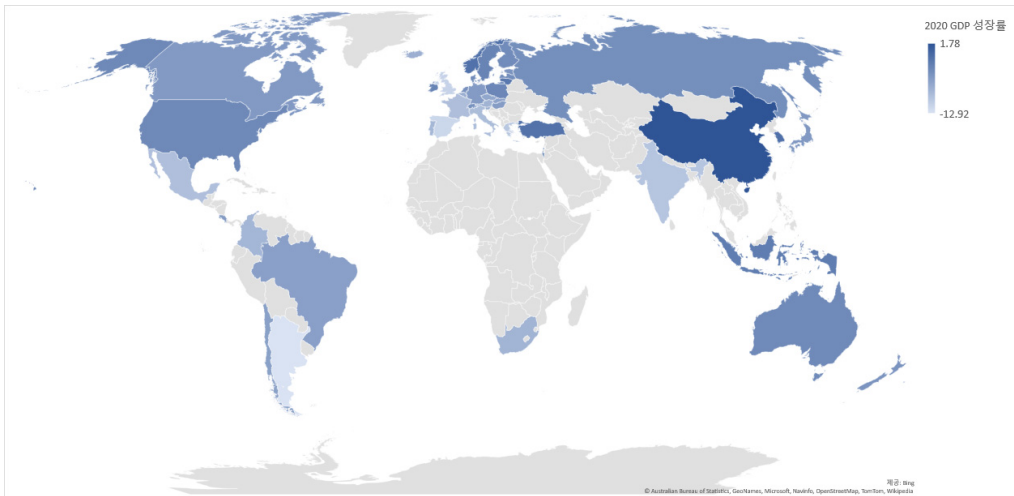
지방재정

- (독일) 독일의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및 지방정부의 역할

독일의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및 지방정부의 역할

개요

-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한 각 국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경제 및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락다운(Lockdown)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
-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은 아래의 그림 및 표와 같이 2020년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



| 그림 1 | 2020년 주요국 GDP 성장률 추정치

자료: OECD

-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약 두 달간, 10월말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락다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특히 독일에서는 이로 인해 피해 또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 국내 재난지원금 형식의 보조금(Überbrückungshilfe)을 지원하고 있음
- 보조금 지급 초기('20. 3~5월)에는 연방 및 주정부 중심으로 신청과 심사가 진행되어 독일 내에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(Bürokratie)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으나, 하반기의 2,3차 보조금 지급에서는 도시 단위의 지방정부에 지급과 심사권한을

부여한 바 있음

- 본 원고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제외한 반환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지급체계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음

| 표 1 | 2020년 주요국 GDP 성장률 추정치

국가	2020 GDP 성장률(%)	국가	2020 GDP 성장률(%)
중국	1.78	네덜란드	-4.55
한국	-1.09	스위스	-4.69
노르웨이	-1.18	에스토니아	-4.74
터키	-1.30	뉴질랜드	-4.81
리투아니아	-1.95	일본	-5.29
인도네시아	-2.43	캐나다	-5.39
아일랜드	-3.20	독일	-5.53
스웨덴	-3.22	코스타리카	-5.58
폴란드	-3.51	헝가리	-5.66
미국	-3.70	브라질	-6.02
호주	-3.83	체코	-6.79
덴마크	-3.88	벨기에	-7.45
핀란드	-3.97	포르투갈	-8.43
이스라엘	-4.15	이탈리아	-9.05
세계	-4.18	프랑스	-9.11
러시아	-4.28	영국	-11.25
라트비아	-4.35	스페인	-11.63
룩셈부르크	-4.45		

자료: OECD

보조금 지원의 재원

- 유례없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포함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해 2,500억 유로(약 330조원, 각 주정부 포함)의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으며, 2021년에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1,000억 유로(약 130조원)의 추가 부채를 계획하고 있음
- 그러나 연방재무부의 2020년 예산결산에 따르면 651억 유로의 재정 적자가 있었지만,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왔던 2010년 82%보다 낮은 70%정도로 주요 세수가 188억 유로 가량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되어 왔음

1차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(Überbrückungshilfe I)

- 2020년 3월 독일 정부는 500억 원 규모로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였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(예술계 프리랜서 포함)가 대상이었음
- 이 지원 프로그램은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직원 10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는 최대 15,000 유로, 기타 1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,000유로까지 3개월간 일회성으로 지원하며, 연방정부의 발표는 최대한 서류작업을 줄이고 즉시지원(Sofort-Hilfe), 비관료주의(Unbürokratie)를 표방하였으나,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
- 1차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매출이 감소하였는지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

1차 지원금 지급 체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

- 지원금은 비교적 신속하게 지원되었으나, 지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관계로 지원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42%(최소 15%)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지불해야 했으며,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음
-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일정하지 않은 예술계 종사자에게 독일의 관료주의는 어김없이 작용하였는데, 실제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예술계 이외의 다른 임시직¹⁾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많은 예술계 종사자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음
- 뉘른 시의 한 남성은 선지급 후심사의 허점을 이용해 모두 91번의 신청서를 작성해 110만 유로를 수령하는 등 보조금 지원이 악용된 사례도 있었음
- 지원금 심사 및 지급권한이 주정부에만 주어짐으로써 과도한 업무쏠림 현상으로 인한 심사의 부정확성 (특히 위와 같은 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관료주의 작용)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원금에 대한 권한을 각 시(Stadt), 군(Kreis)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음

1) 독일에서는 Minijob, Nebenjob이라는 명칭으로 월 450유로까지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는 임시직이 존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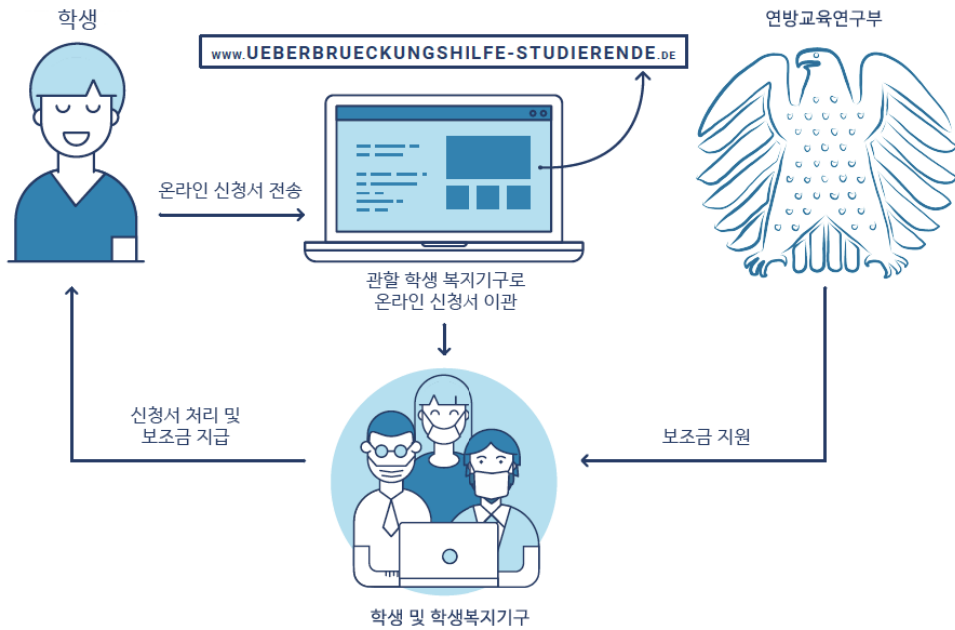
2차 보조금 지원 (Überbrückungshilfe II, III)

-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한 락다운 정책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1차 지원금에 이어 2차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, 이에 따라 11월부터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음
- 2차 보조금은 1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였는데, 신청 과정에서 회계사 등을 통해 서류를 우선 검증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5,000유로까지, 기업의 경우 최대 20만 유로의 4개월분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있음
- 1차 보조금 지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부의 문제점이 있었으나, 2차 보조금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면제되었음
-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사 비용 등 또한 고정비용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고, 심사권한을 각 시, 군 정부에 위임²⁾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 및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

대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(Überbrückungshilfe für Studierende)

-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'20년 여름학기(4~9월) 및 20/21 겨울학기(~'21.3)에 COVID-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0유로(한화 약 66만원)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
- 독일의 대학은 대부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으로 AStA(Allgemeiner Studierendenausschuss, 총학생회) 및 공법상 기관인 Studierendenswerk(학생 복지기구)에 상당부분의 대학행정 및 복지, 학생생활에 대한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음
-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학생복지기구로 온라인신청서가 전송되고 자치권한을 가진 각 학생회 및 학생복지기구가 보조금 지급의 심사주체가 되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됨
- 지원금은 학생이 처한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, 개인 계좌 잔고 및 계좌내역에 따라 최소 10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음
- 대학생에 대한 보조금은 위와 같은 체계로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의 보조금과는 달리 대체로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

2) 위임사무는 독일 기본법 85조에 의해 연방정부에서 각 주로 위임되는데 이 규정은 주정부에서 각 계마인데로 위임되는 경우도 포함함. 즉, 연방에서 각 주로 보조금 심사와 지급을 위임한 바와 같이 연방에서 각 계마인데로 위임한 것



| 그림 2 | 대학생 보조금 지원 체계

(자료: 독일 연방교육연구부)

시사점

- 코로나19의 유행은 각 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유례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, 그 과정에서 국가별로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
- 지방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독일에서도 1차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, 2차 지원금 및 학생 지원금 지급에서는 지원금 심사 및 지급을 위임사무로 주정부에서 시, 군 정부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
-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경제규모와 사회시스템의 차이로 어려움이 따르나, 재난지원금의 심사 및 지급 등이 시, 군정부에 위임되어 처리되는 지급체계는 주목할 만한 사례일 것임



장인성 통신원

(독일 아헨공과대학교)
drong85@naver.com